전남광주 공무원 근무지 보장 두고 '옥신각신'

시정질문서 김강헌 의원 인사권 제약·형평성 지적

민형배 시장 "공감하지만 공직 전체 문제는 아니야"

공무원노조 "법률로 정한 약속"…특별법 개정 반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본회의장서 열린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시정 질문으로 번졌다. 인사권 제약과 형평성 문제로 인한 특별법 개정에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일각에서는 법률로 정한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김강헌 의원은 이날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와 전남의 조직이 합쳐졌지만 사실상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재는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시장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며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남 공무원들은 서부권 무안과 동부권 순천 등을 오가는데, 광주 공무원들은 광주권에서만 근무를 한다"며 "이처럼 근무지를 보장받는 게 불공정한 것 아니냐. 인사권 행사에 제약이 있지는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특별법을 논의할 때부터 이런 조항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제약이 아주 많다"며 "조직운영을 제한을 해두면 여러 행정서비스 요구에 응답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지는 않다"며 "다수의 공무원이 특별법과 관계없이 일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에 선을 그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조 3항에는 통합 전 임용된 공무원이 종전 광주 또는 전남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도록 보장하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할 때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행정기능을 광주와 무안, 동부청사로 나누는 조직개편에 따라 중복 부서를 통합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데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승진가점과 주거·교통비 지원에도 첫 조직개편 과정에서 종전 관할구역을 벗어난 새로운 근무지를 희망한 5급 이하 직원은 91명에 달했다.

반면,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근무지 보장은 공무원,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법률로 명시된 약속"이라며 개정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당선 전 근무지 보장 약속과 이후 관련 개정 발언이 엇갈리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종전 근무지 보장은 통합의 걸림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통합의 출발점이며, 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발표부터 앞세워 갈등을 키우는 행정부터 고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반도체팹 수요 고려 '광주송정역' 확장규모 더 늘려야"

국감 핫이슈

조인철 "전국서 가장 협소…과소 수요예측에 혈세 낭비"

인구 증가 반영해 시설 규모 키우고 연계망 확정해야

광주군공항에 반도체 팹 조성과 달빛고속철도 신설 등에 따른 늘어날 수요를 고려할 때 현재 추진 중인 확장사업의 규모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사장 김태승)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송정역의 이용객 수요가 급증할 것을 고려해 현재 진행중인 확장공사를 지금이라도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23년에 설계해서 진행 중인 확장 공사는 이용객 3만7000여명을 전제해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너무 많다"며 변화된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우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반영이 안 돼 있다"며 이로 인해 늘어날 인구가 예측 기관들에 따르면 20%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새 역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3만7000명이라 하더라도 (현재 계획대로 공사하면) 결국 내부 역사만 키워놓는 공사이기 때문에 외부에 연결 공간 등은 전혀 변함이 없어 지금처럼 계속해서 교통 혼잡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광주송정역을 15년전 개통할 당시 공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과소 수요 예측 하거나 부실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은 지금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일 평균 이용객은 2만2000여명이 넘는다. 10년 전에 예측은 1만2000여명 정도였는데 2배 가까이 된 것"이라며 "이렇게 수요를 예측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승 철도공사 사장은 "보여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의원의 예측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정확한 수요 예측과 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주변의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변 계획이 확정되면, 말씀대로 어느 정도 확장을 하고 또 주변 연계 교통시설이나 교통 관련 시설물을 갖다가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다보니 광주송정역은 전국에서 가장 혼잡한 역사가 됐다"며 "저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이용하고 있는데 거의 대합실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통로만 이용해서 플랫폼으로 곧바로 가서 승하차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광주송정역이) 협소하다고 느꼈다"며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는 광역시급의) 역사치고는 환승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추진과 관련해 늘어나는 철도이용객 수요를 고려해 그 시발점인 광주송정역과 광주역을 살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사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철도 승강장 높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코레일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9월까지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된 게 15.8% 였으며, 지연 사유의 33.7%가 승하차 지연이고, 이는 승객들이 오르고 내리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탓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연구원에서 플랫폼을 고치면 46.7%를 승하차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확장공사 재조정과 함께 철도 승강장 높이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산업부, 반도체 경쟁력 강화 전담 조직 가동

국무회의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의결…단장 국장급

반도체 분야 메가프로젝트의 이행을 점검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전담하는 조직이 산업통상부에 신설된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 등을 담은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시행된다.

새로 출범하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파생된 법정사무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장급 조직이다.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로 구성되며 반도체 정책기획과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포함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반도체 분야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 신규 법정사무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직제 개정은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산업자원안보실·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에 이어, 반도체산업 초격차 유지와 미래산업 수요에 대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집중 보강하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는 AI, 자동차, 가전 등 모든 산업에 필수 공급망이며, 대한민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핵심산업"이라며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법무·통일·외교·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으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첫해인 2027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이 세종 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먼저 이전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 등이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순차 이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에는 전체 이전 대상기관 44곳 중 27곳이 임시청사를 활용해 단계 이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한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이전이 추진되는 기관은 나머지 17곳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광주,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도입

교원·학부모 의견 반영…내년까지 초·중 선도학교 운영

'교실 집중지원 종합계획' 수립…수업·평가 전환 기반 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위한 준비 기간을 2027년까지 운영한다. 일선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 방식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뒤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13일 광주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안정적인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위해 '교실 집중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9월1일 서·논술형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K-교육통합추진단 교육과정개발평가팀을 신설했다. 이후 한 달간 공청회 6회와 교원단체 간담회 5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논의 과정에서 평가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시행 시기와 방식, 절차 등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26~2027년을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교사와 학부모, 교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우선 교사 주도의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전환, 성장 중심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업·평가, 교원 지원, 행정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교실 집중 지원 종합 계획'을 추진한다.

수업·평가 분야에서는 교실 수업 지원과 인공지능(AI) 평가 시스템 구축, 평가 관련 민원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선다. 교원 지원 분야는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전문성 향상, 수업 시수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행정 지원 분야에서는 교원 업무 경감과 교육정책의 현장 영향 평가제 등을 추진한다.

서·논술형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선도교사 모집과 강사단 양성 연수도 진행한다. 2027년에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선도학교를 운영해 평가 전환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선도학교는 학교의 희망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년별 또는 교과별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서·논술형 평가 비율도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성과 연구를 통해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공청회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부터 실행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서·논술형 평가가 수업 전환을 이끌고 궁극적으로 '교육 지산지소'를 실현하는 교육 대전환의 핵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나주·순천만 동결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적용…통합시의회도 인상 추진

전남광주 지방의회 절반이 의정비 인상을 확정한 가운데 대부분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남광주 시·구·군 기초의회에 따르면 27곳 중 14곳이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곳은 동결, 11곳은 미정으로 집계됐다.

14곳의 인상 지역 중 목포시만 1.75%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13곳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했다.

광주권에서는 5개 자치구 모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 서구 5271만원, 북구 5170만원, 광산구 5143만원, 남구 4962만원, 동구 4755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남권 22개 시·군에서는 목포시를 비롯한 담양·곡성·화순·해남·무안·함평·장성·진도군 등 9곳이 인상을 결정, 연간 의정비는 4048만~4440만원 수준이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인상을 결정한 기초의회는 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는 유지하고 월정수당을 올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에서 월정수당을 올릴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대부분 지역이 3.5%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와 나주시는 동결을 결정했고, 여수시와 광양시를 비롯한 강진·고흥·구례·보성·신안·완도·영광·영암·장흥군 등 11곳은 인상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다만, 신안군과 영암군은 각각 10%, 7%의 인상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광역의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심사가 계류 중인 가운데 조만간 의원들이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시의원들은 옛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의정비 평균인 월 568만6405원, 연간 6823만6860원을 임시로 적용받고 있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통합에 따른 의정활동 범위 확대 등을 이유로 서울시의회 수준의 의정비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